

한중경제포럼

제21-04호 2021년 10월 22일

중국의 공동부유: 의의, 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

2021년 제4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의 공동부유: 의의, 배경 및 향후 정책 방향
2. 일 시: 2021. 10. 13(수) 16:00~18:30
3. 발표자: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연구원 천즈강(陈志刚) 연구원

1. 공동부유의 함의 및 역대 중국지도자들의 발언

- 중국정부는 2021년 5월 20일 〈저장(浙江)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공동부유의 함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함
 - 〈의견〉에서는 공동부유를 선명한 시대적 특징과 중국의 특색을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고, '전체 인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 보편적으로 생활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자부심이 넘치며 살고 일하기 좋은 환경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공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며, 인민과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달성하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와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시진핑(习近平) 주석도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고, 인민들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이 모두 부유한 것을 의미하며, 소수 사람만 부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하는 평균주의가 아니며, 단계적으로 공동부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2021년 8월 17일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

- 공동부유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6가지 함의를 포함하고 있음.
 - 첫째, 공동부유는 전체 인민의 부유이며, 소수 사람만의 부유가 아님.
 - 둘째, 공동부유는 전면적인 부유, 즉 인민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모든 방면을 포함하며,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부유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생활이 아님.
 - 셋째, 공동부유는 여전히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공동부유이며, 선을 굿듯이 가지런한 평균주의적인 동등한 부유가 아니며, 부자를 죽여 빈민을 구제하는 것도 아님.
 - 넷째, 공동부유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특정 시점에 동등한 정도로 실현하는 것이 아님.
 - 다섯째, 공동부유는 질적 발전을 토대로 하며, 파이(pie)를 키우는 기초 하에 파이를 잘 나누는 것이며, 효율·공정·발전·공유의 변증법적 통일임.
 - 여섯째, 공동부유는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다스리며 공동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정부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체 인민의 공동 노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임.

□ 공동부유에 관한 사상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으며, 역대 중국 지도자들 모두 공동부유에 대해 언급한 바 있음.

- 대동사회(大同社会: 평등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이 항상 꿈꾸는 아름다운 소망이며 이에 관련한 사상들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옴.
 -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해진다(大道之行也, 天下为公)'
 -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治国之道, 富民为始)'
 - '백성이 가장 근본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民为本, 社稷次之, 君为轻)'
- 마오쩌둥(毛泽东)은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함.
 - 마오쩌둥은 1955년 7월 <농업 합작화의 문제>에 관한 보고에서 처음으로 "공동부유"의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합작화의 실현으로 전체 농촌인민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도록 한다"는 내용임.
- 덩샤오핑(邓小平)은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先富)이 나중에 부유해지고자 하는 사람들(后富)을 이끌어 주어 최종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사회주의의 목적은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지 양극화가 아니며, 공동부유가 사회주의의 본질이자 가장 큰 우월성이라고 강조함.
 - 또한 "공동부유는 보편적인 부유를 뜻하지만 기존의 부를 평균적으로 분배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다 같이 동등한 수준으로 실현할 수 없다. 공동부유는 먼저 부유해진 사람들이 이윤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과 기술양도 등 방식을 통해 나중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것을 통해 실현되며, 중국은 샤오캉사회(小康: 의·식·주 걱정이 없는 물질적으로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실현한 이후 공동부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동부유의 로드맵과 시간표를 제시함.
- 장쩌민(江泽民)은 전면적인 샤오캉을 토대로 공동부유를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후진타오(胡锦涛)는 사회주의 공정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을 토대로 공동부유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진핑은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를 촉진하고 효율과 공평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야 한다. 1차, 2차, 3차 분배가 조화로운 기본 제도를 구축하고, 세수, 사회보험, 이전지출 등의 조절 강도와 정확성을 제고하며, 중소득층의 비중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불법소득을 금지함으로써 중간이 크고 양쪽 끝부분은 작은 타원형 분배구조를 형성하여 사회의 공평정의를 촉진하고 전 인민의 공동부유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함(2021년 8월 17일에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

2. 공동부유의 새로운 목표를 제기한 배경 및 의의

- 공동부유의 실현은 중국공산당의 장기 분투목표이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특성과 취지에 의해 결정된 것임.
 - 중국공산당의 특성과 취지는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 이익을 잘 실현하고, 잘 지키며, 잘 발전시키는 것임.
 - 공동부유는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임.
-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임.
 - 시진핑 주석은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빈곤지역이 오랜 기간 빈곤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오랫동안 향상되지 못한다면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함.
 - 19기 4중 전회에서는 "공동부유"를 중국 국가제도와 국가거버넌스 시스템의 13가지 선명한 우위에 포함시킴.
 - 중국 국가제도와 국가거버넌스 시스템의 13가지 선명한 우위는 △당의 집중적인 리더십원칙의 견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원칙의 견지 △전면적인 의법치국 원칙의 견지 △전국을 통합적으로 배치하는 원칙의 견지 △각 민족 평등 원칙의 견지 △공유제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다양한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원칙의 견지 △전 인민이 정신사상 면에서 단결 유지 △공동부유 목표의 추진 △개혁과 혁신의 견지 △우수인재 선발과 양성 △당이 군대를 지휘하는 원칙의 견지 △일국양제(一国两制) 원칙의 견지 △독립자주와 대외개방의 상호 결합의 원칙 견지를 의미함.
- 공동부유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新时代)'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특징임.
 -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시대'는 샤오캉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한 이후 향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야 하는 시대이며, 점차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시대라고 정의함.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八个明确)>에서도 "신시대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인민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부단히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공동부유의 추진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 이후의 주요 과제임.

- 중국은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과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두 개의 백년" 목표를 갖고 있음.
 -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역사적인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백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함.
 -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면서, 중국정부는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함으로써 인민들이 공동부유를 보고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진전을 이루고자 함.
- 중국의 '두 번째 백년' 목표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과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두 개의 단계로 나뉘며, 공동부유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 두 개 단계의 주요 과제이자 중요 임무임.

* 첫 번째 단계(2020~35년)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중국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이 대폭 향상되어 혁신형 국가의 선두에 들어서고, 인민들이 평등하게 참여·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법치국가·법치정부·법치사회가 기본적으로 구축되며, 여러 방면의 제도들이 더욱 완비되고, 국가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문명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며, 국가 문화 소프트파워가 현저히 향상되어 중화 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인민들의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중소득층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고, 도·농 지역간 발전 격차와 주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평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전 인민의 공동부유가 큰 발걸음을 내딛으며, 현대사회 거버넌스 구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사회가 활기차고 질서적이며 조화롭고, 생태환경이 근본적으로 호전되어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임.

* 두 번째 단계(2035~21세기 중엽)는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반으로, 중국을 부강·민주·문명·조화의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중국은 물질·정치·정신·사회·생태 문명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국가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이 앞장서는 국가가 되며,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중국 인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며, 중화민족이 세계 민족의 선두 대열에 서있을 것임.

□ 공동부유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공산당을 대표하여 중국 인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공언한 장엄한 선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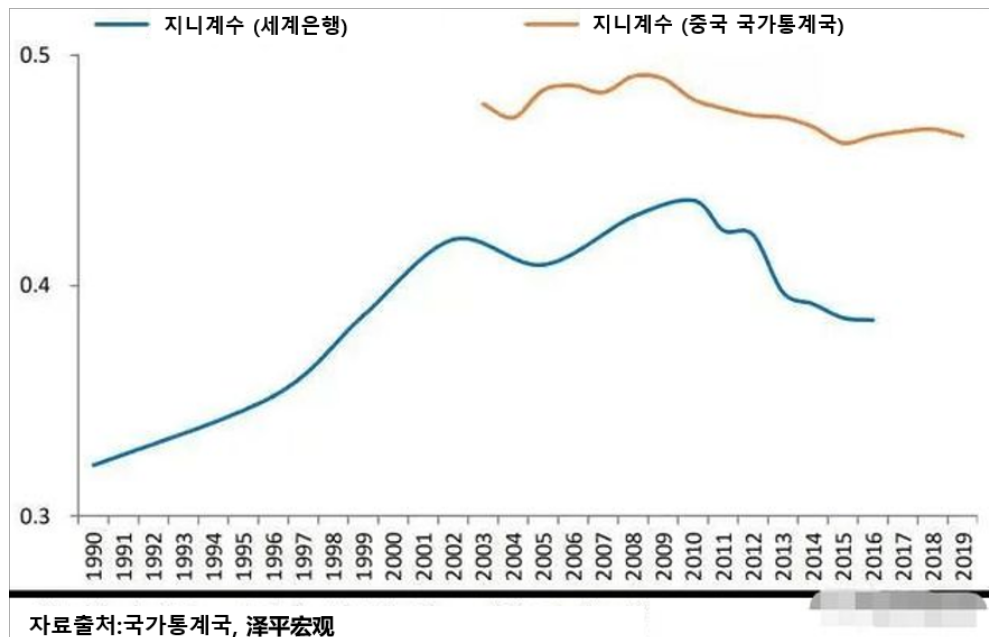
-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분투목표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탈빈곤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동부유를 확실하게 추진하며民生복지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3. 공동부유의 제약 요인 및 실현 조건

□ 중국은 지역간·도농간 발전이 불균형하고,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이 크고, 지니계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공동부유의 발전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중대 문제들을 안고 있음.

- 중국은 동서 지역간·남북 지역간·도농간 발전이 불균형함.
 - 동부지역이 서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북부지역보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음.
 - 중국의 도농간 인구 비중은 신중국 건국 초기에 1:9였으나 2020년 도시인구 비중이 63.89%까지 상승함. 농촌 인구 수는 5억 명 이상으로 중국 전체인구의 1/3을 차지하며, 전 세계 농촌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임. 이는 현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기본적으로 건설하는데 있어 분명한 취약점임.
 - 2020년 기준으로 농촌인구 중 약 4억 명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중간소득층 최저기준 1인당 연소득 3만 위안, 1인 1일 평균소득 20 국제 기어리-카미스 달러(Geary-Khamis dollar)보다 낮는데, 이들 인구가 총인구에서 20%를 차지함.
- 중국은 상대적 빈곤층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향후 어느 수준까지 발전하든지 전체 인구의 5% 정도 (7,000만 명)에 달하는 상대적 빈곤층이 항상 존재할 것임.
 - 2020년 5월 28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양회 폐회식의 기자회견 중에 "중국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3만 위안이나 6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월 소득은 1,000위안 밖에 안 됨. 1,000위안이면 중국의 중형 도시에서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도시인구 중 실업인구의 비중은 5%수준으로 2,300만 명 이상에 달하며, 최저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장애인 수가 963.4만 명, 최저생활보장금을 수급받는 빈곤 중증 장애인과 농촌에 남아있는 노인 및 아이들 숫자가 거의 300만 명에 달함. 그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중점 대상자들이 될 것임.
- 중국의 지니계수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국제표준인 0.4 경계선을 넘어섬.
 -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8까지 상승함.
 -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에 달하며, 전체인구의 20%에 달하는 극빈곤층 인구의 소득과 소비의 비중은 4.7%에 불과한 반면 상위 20% 부유층 인구의 소득과 소비 비중은 50%에 달함.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의 부유층 인구가 전국 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10%의 극빈곤층 인구가 차지하는 부는 1%에 불과함.

그림 1. 중국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 반면 중국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보장과 경제적 기초, 부단히 완비되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과 국가 재분배 능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조건도 갖추고 있음.
-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정치적 보장으로, 중국공산당은 공동부유와 관련한 전 국가적 공통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음.
 - 19기 5중 전회에서 발표한 "건의" 내용에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확실히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 규칙과 로드맵도 제시함.
-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는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데 견실한 경제적 기반이 될 것임.
 - 2020~35년 중국의 중장기 GDP 성장률은 5% 정도로 예상되며, 노동생산성과 주민소득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35년 중국의 GDP규모는 2020년에 비해 2배로 성장해 2020년의 101.69조 위안에서 20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되고, 동기간 GDP누적액은 2,25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2020년 불변가격).
 - 1인당 GDP도 7만 2천 위안에서 2배 늘어난 14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2017년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보면 2020년 1.64만 달러에서 2035년 3.28만 달러로 증가하여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중국은 성숙된 도시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임. 도시는 농촌에서 이주한 인구를 흡수하는 주 거주지가 되고, 농촌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도시 인구 수는 2020년 9.02억 명에서 2025년 10억 명, 2035년 10.7억 명 이상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도시화가 고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이미 도·농간 1인당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격차가 축소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농촌주민 대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07년 3.14배로 최고치에 달한 후 2020년 2.56배로 축소되었으며 2035년에는 2.0배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농촌주민 대비 도시주민의 소비지출은 2003년 3.21배로 정점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0년에는 1.97배, 2035년에는 1.5배로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은 이미 전 인민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계속해서 완비·고도화되고 있음.
 - 2020년 중국의 기본양로보험,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10.12억 명, 2.2억 명, 2.72억 명에 달했음.
 - 2020년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13.61억 명으로 가입자 비중이 전체인구의 95% 이상에 달하였고, OECD국가의 총 인구수(13.60억 명)와 가입자 비중(2017년 기준 미국은 91.2%, 그 중에서 개인보험 가입자 비중은 63.1%) 수준을 초과함.
- 중국의 국가 재정능력이 대폭 제고됨에 따라 국가의 재분배 능력이 향상될 것임.
 -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수입은 2020~35년 기간에 2배 이상 늘어나 18조 위안에서 36조 위안 이상 증가하고, 누적액은 40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그 중에서 중앙재정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총액이 10조 위안에서 20조 위안 이상으로 늘어나고, 누적액은 22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4.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 [공동부유의 목표] 두 단계로 나누어 2035년까지 실질적 발전을 실현하고 2050년까지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1단계] 2035년까지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중간소득층 비중이 증가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가 균등화되고, 도·농 지역간 발전과 주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축소되어 전 인민의 공동부유가 실질적 발전을 실현하게 될 것임.
 - [2단계] 2050년까지 전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함.
- [공동부유 시범구] 중국정부는 공동부유 목표 달성을 위해 저장성(浙江)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음. 저장성은 경제력, 산업구조, 혁신능력, 개방성, 녹색발전 등 측면에서 시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임.¹⁾

1) 중국정부는 2021년 3월 이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의견〉 및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실시방안

- [규모·행정] 저장성은 총 면적 10.55만km², 상주인구 6,456만 명으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지역(省)이며, 0 행정구역 상 부성급(副省级) 도시 2개, 지급시(地级市) 9개, 현·시(县·市) 53개를 포함하는 등 행정면에서 대표성이 강함.
- [경제력] 저장성은 경제력과 노동생산성이 높고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효율이 크게 제고되는 등 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임. 주민소득도 이미 "고소득 경제체" 수준에 도달함.
 - 경제규모는 6조 4,613억 위안이며, 산업구조의 최적화·고도화 및 경제효율 측면에서는 중국내 선두로 장쑤(江苏), 광둥(广东), 산둥(山东)보다 앞서 있음.
 -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전국 평균의 1.63배 수준인 5.24만 위안으로,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의 뒤를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함. 도시주민의 소득과 농촌주민의 소득은 각각 연속 20년과 36년간 전체 성(省)지역 중에서 1위를 차지함.
 - 2020년 1인당 GDP는 10만 600위안(14,600달러)으로 고소득 국가 기준(세계은행 2021년 기준)인 12,695달러를 상회함.
 - 2015~20년 저장성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2.4만 위안에서 16.6만 위안으로 33.9% 향상되었고, 첨단·혁신 요소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동력으로 떠오름.
- [산업구조 전환] 저장성의 산업구조는 "산업경제"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이 뚜렷하며, 서비스업의 주도적인 위상이 강화되어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에 부합됨. 신·구 성장동력 전환의 효과가 커지면서 전국 디지털 경제의 선두 주자가 됨.
 - 저장성은 인터넷, 빅데이터가 폭넓게 응용되어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함. 2020년 1차·2차·3차 산업의 비중은 3.3: 42.1: 54.6로, 이는 저장성이 서비스형 경제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 성 전역에서 디지털경제 "1호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디지털경제와 "3신(三新: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새로운 모델)" 경제 및 플랫폼 기업이 큰 성장을 거두어 현재 전국 상위권을 차지함.
 - 산업의 디지털화지수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로 실물경제를 진흥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경로를 형성함.
- [혁신주도 발전] 혁신주도는 저장성 경제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며 혁신투입 수준은 이미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추월함. 다수의 우수기업들이 혁신주체이며 공업기업은 "제조"에서 "스마트제조"로 전환하고 있음.
 - 2020년 저장성의 과학기술진보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5%에 이르고, R&D 투자는 1,809.2억 위안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8%(전국 2.25%)에 달하여 OECD 회원국의 2.08%를 상회함.
 - 최근 저장성 기업의 연구개발 수준(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있음. 2020년 저장성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비율은 90.9%로 기업혁신능력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저장성의 과학기술력은 현재 양적 축적에서 질적 도약으로, 개별부문 실력 향상에서 시스템 능력 향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임. 특허출원 수와 발명특허 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술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혁신능력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큰 발전을 이룸.

(2021~25년) 등 문건을 연달아 발표하여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도시화 발전] 저장성 경제의 집약적인 특징이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도시군과 중심도시는 고품질의 주요 공간 형태이자 동력원이 되고 있음.
 - 현(縣)급 경제를 주체로 하는 공간구조가 도시경제를 주체로 하는 공간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진화(金华), 원저우(温州) 4개 중심도시가 경제와 인구의 주요 집약지로 부상함. 이 4개 도시에 저장성 전체 GDP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4개 도시의 인구가 저장성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저장성의 상주인구 수는 2010년 5,442.7만 명에서 2020년 6,456.8만 명으로 18.6%가 증가함. 2010~20년 항저우, 닝보, 진화의 신규증가 인구 수는 각각 324만 명, 180만 명, 169만 명으로, 인구가 중심도시로 집중되는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 [개방형 발전] 저장성은 이미 개방형 경제대성(大省)이며, 수출입 상품 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전략적인 허브지역으로의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상품 수출입 규모는 3조 3,808억 위안, 대외개방도는 52.3%였음. 수출 2조 5,180억 위안, 수입 8,628억 위안으로 전국대비 각각 10.5%, 14%, 6.1%를 차지함. 상품무역 흑자는 2,400억 달러에 달함.
 - 전체 수출입 상품 중에서 가전 및 첨단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함. 수출상품 구조는 전통적인 경공업, 기계 기초부품 등 노동집약형·자원집약형 위주에서 기술 및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 전자, 운송수단 등 설비로 전환됨.
 - EU, 미국, 주요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중심의 다국적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99%가 민영기업에 의해 완성됨.
- [기업의 성장] 저장성의 현대 기업들은 양과 질이 모두 높은 수준이며, 현대 기업들이 경제발전의 주축이 됨. 글로벌 선도기업과 유명 브랜드기업을 중심으로 저장성 다국적기업의 육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가치·공급 체인의 글로벌 구도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합류함.
 - 2020년까지 저장성의 국내 상장회사는 518개로 전국 2위이며, 신규 국내 상장사는 62개로 전국 1위임. 또한 저장성은 중국 500대 민영기업 중 총 96개, 중국 500대 기업 총 43개, 세계 500대 기업 중 5개를 보유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도 "작은 거인", "부품 스타", "일품목 일등기업" 등으로 불리며 순조롭게 발전해 왔으며, 다수의 우수한 예비 상장 기업 자원도 충분함.
- [녹색 발전] 저장성은 "아름다운 중국"의 모범지역으로,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공존하는 새로운 길로 진입함.
 - 2020년 기준 저장성은 정부가 정한 오염수질 단계(劣V급 수질)에서 벗어나, Ⅲ급 및 그 이상 수질(생활용수 수준) 단계가 94.6%를 차지하며, 일일 대기질 우량일수 비중이 93.3%이며, 11개 구(區)와 시(市)의 평균 PM2.5 농도가 19.4%로 대폭 감소하였고, 산림녹화율이 60%를 초과함.
 - 저장성은 오수공치(五水共治: 오염수, 홍수, 급수, 침수 및 절수(节水)에 대한 통합관리) 정책을 통해 발전에 따른

오염을 해소하고 환경 오염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저장성은 생태자본(生态资本)을 부민자본(富民资本)으로 변화시키는 면에서 아주 뛰어나며, "녹수청산(绿水青山: 아름다운 환경을 뜻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과 패러다임을 창출함.
- 저장성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유역성 치수난제(流域性治水难题) 등 환경에 관한 난제를 해결함.

- [공평성·포용성 특징] 저장성은 중소득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도농간 격차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공평성과 포용성의 특징이 뚜렷함.

- 2020년 저장성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5.23만 위안이고, 가구당 평균 인구는 2.35명임. 중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7.4%를 넘어 양쪽 끝부분은 적고 가운데가 많은 사회구조가 형성됨.
- 2020년까지 저장성 도시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연속 20년간, 농촌지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연속 30년간 전국 1위를 차지했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1.96: 1로 줄어들어 전국 평균인 2.56를 크게 하회하며 전국에서 도농간 소득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가 됨. 저장성은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구(区)의 주민소득이 전국 평균을 상회함.
- 저장성 주민의 엔젤계수는 0.285로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부유한 생활수준에 도달했으며, 1인당 소득이 4,600위안보다 낮은 절대빈곤에서 탈피함.
- 저장성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주민의 기대수명은 79.47세이고, 주요 건강지표 역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함.

- [가능성과 잠재력] 그 외에도 저장성은 공동부유를 뒷받침해주는 경제구조의 고도화, 도농 융합의 완비, 지역간 조화로운 시스템과 메커니즘 구축 및 포용적·발전적인 방법 모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가능성을 갖고 있음.

- 특히 취업 확대의 안정성과 기술진보 상호간 관계를 잘 처리하고,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 부족 문제나 자원 제약 등의 모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저장성의 고품질 발전과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실시방안(2021-25년)>(이하 "실시방안")에서는 "4대 전략적 포지셔닝", 2단계 발전 목표 및 주요임무 등을 제시함.

- 실시방안에서 제기한 "4대 전략적 포지셔닝"은 △고품질 발전·고품질 생활의 선행구 △도·농간 협조발전의 선도구 △소득분배 제도개혁의 시험구 △문명·조화의 아름다운 샤프터의 전시구를 건설하는 것임.

- 실시방안에서는 저장성의 공동부유 발전 목표에 대해 매년 새로운 진전을 거두고, 2025년 1단계까지 실질적 진전을 거두며, 2035년 2단계까지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함.

- 2단계인 2035년의 목표는 고품질 발전이 더 큰 성과를 거두어 1인당 GDP와 도·농 주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소득과 재산 분배구조가 더욱 고도화됨으로써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물질·정치·정신·사회·생태 문명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임.

- 공동부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임무는 저장성에 7개의 모범지역을 건설하고 4개의 "우선"과 3개의 "

아름다움"(四个"率先"+三个"美")이라는 발전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함.

- 우선 공동부유의 시스템·메커니즘과 정책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공동부유를 위한 개혁과 모색의 모범지역이 되는 것
- 우선 활력과 혁신력과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발전 모델을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고품질 발전의 모범지역이 되는 것
- 우선 중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타원형(올리브형) 사회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간·도농간·소득간 격차를 줄이는 모범지역이 되는 것
- 우선 사람의 모든 생애주기를 포괄한 고품질 공공서비스의 향유를 달성하여 고품질 생활의 공동 건설과 향유의 모범지역이 되는 것
- 인문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지고 정신적으로 부요한 모범지역이 되는 것
- 생태적인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지고 전 지역이 아름다운 삶터인 모범지역이 되는 것
-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더욱 두드러지고 전 사회가 조화롭고 분발하는 모범지역이 되는 것

표 1.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의 1단계 주요 목표(2025년)

분야	지표	2020년	2025년
경제발전	1인당 GDP (만 위안)	10.1	13
	주민 가처분소득 (만 위안)	5.2	7
소득분배	중소득층 (연간 20~60만 위안) 비중 (%)	24	45
	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 (%)	43	50
	1인당 GDP 대비 1인당 가처분소득 비중 (%)	52.1	54.5
도농 지역 간 조화 발전	지역간 1인당 GDP의 격차	2.21	2.1
	지역간 1인당 가처분소득의 격차	1.64	1.55
	도농 간 소득격차	1.96	1.9 이하
	상주인구기준 도시화율 (%)	71	75
민생복지	1인당 기대수명 (세)	79.47	80
	노동인구 평균 교육연한 (년)	10.8	12
	III급 수질에 도달한 지표수 비중 (%)	93.9	95

□ 또한 실시방안에서는 공동부유를 추진하기 위한 소득분배, 주택, 조세 등의 주요 조치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시함.

- 소득분배 정책으로는 △주민소득과 중소득층을 2배로 확대하는 계획 실시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촉진 △혁신요소와 분배 메커니즘의 완비 △재정정책제도의 혁신·완비 △"선행(善行) 저장" 전면 조성 △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향촌 통합 개혁방안 모색 △소득의 1차, 2차, 3차 분배 촉진 등이 시행될 예정임.

표 2. 실시방안 내 소득분배 관련 정책 조치

주민소득 증대와 중산층 확대	* 합리적인 임금 인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기업에 대한 임금 조사와 가이드라인 발표 제도를 고도화하며, 기업이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며, 최저임금표준이 경제발전 및 사회 평균임금수준과 연동되는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단체 임금 협상을 적극적·안정적으로 추진함.
-----------------------	--

계획 실시	* 비영리 부문에서 소득분배제도를 혁신하고, 직책과 실적에 따른 임금 책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함. * 도농 주민의 자산성 소득 획득채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자산관리 관련 산업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며, 법에 따라 실물경제의 발전을 혁신적으로 장려하며, 대중들이 수익성 금융상품을 나눌 수 있게 하며, 기업이 다양한 주식장려금 및 주식배당 계획을 유연하게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상장회사들이 현금 배당 비율을 높이는 것을 장려함. * 농민을 위한 재부(財富) 창조 계획을 실시하고, 기업과 농민간의 이익 연계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10만 명의 농업분야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10만 채 이상의 농촌 유희 주택을 활성화시키며, 1만 농촌가구의 관광 재부 창조 계획을 추진하며, 100만 채 시골 주택의 태양광 발전 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 경영권·임업권 등 방식으로 기업 주주가 되도록 유도하며, 농민들이 현재 사는 곳과 가진 땅을 활용하여 취업과 창업을 하도록 이끌어 줌. * 예비인재역량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시스템을 완비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인재, 과학기술 인력, 창업가 소질이 높은 농민 등 중점 계층의 소득증대 잠재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반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중소득층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내외 고급인재와 대학 졸업생들이 저장성에서 창업하도록 적극 유치함. * 다양한 조치를 통해 중소득층 가정의 교육, 의료, 양로, 육아, 주택 등에 대한 지출 부담을 줄임으로써 중 소득층을 안정시켜 중소득층 중심의 사회구조로 고도화함. * 정부기관과 비영리 부처 및 사회 각 분야의 인재 이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와 시스템을 완비하고, 시험을 통한 인재선발 제도를 규범화함으로써 상이한 계층의 공정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이동채널을 원활하게 함. * 법에 따라 소득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개인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법에 따라 합법적인 소득을 보호하고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불법소득을 금지함.
양질의 취업 촉진	* 취업업무 감독·장려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신규 취업자수 500만 명, 도시조사 실업률 5.5% 이하에 도달하게 함. *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취업을 견인하고, 취업 통로와 형식이 다양한 취업보장 제도를 완비함. 우선적으로 신형 취업형태의 규범적·혁신적 발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택배 기사·콜택시 기사·온라인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업종 종사자들의 노동 권리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함. * 각종 취업 지원금을 통합 배치하고 도·농 일체화 및 온·오프라인 일체화의 취업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함. 대학 졸업생·전역 군인·농민공 등 중점 취업준비자 지원시스템을 완비하고 대학졸업생들이 도시, 농촌 및 지역사회에서 취업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며 "1만 명 대학졸업생의 향촌 지역사무소 취업" 프로젝트를 실시함. * 기업이 사랑나눔 일자리(爱心岗位)를 개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취업곤란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배치를 강화하며,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를 감소시킴. * 조화로운 노동관계와 관련 서비스의 종합 개혁을 추진하고 시범구를 건설함. 공정한 취업환경을 조성하고 호적·지역·신분·성별 등 취업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며, 노무파견 행위를 규범화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저장"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합리적인 근무제도와 휴가제도를 완비함.
혁신요소와 분배 메커니즘의 완비	*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대학교에 더 많은 연구경비 사용권 및 소득분배 주도권을 부여하고,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기술방법 결정권 및 경비 사용권을 부여하며, 과학기술 연구인력에게 직책 성과의 소유권 및 10년 이상의 장기 사용권을 부여하고, 과학기술 연구인력의 성과 전환 수익배당비율을 높여줌. * 무형자산인 기술의 상장 거래와 공개 경매 및 거래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의 가격을 책정하는 메커니즘을 보급하며,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평가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장려시스템을 완비함. * 데이터 요소시장의 형성을 가속화하고 데이터거래소 설립에 대해 탐구하며, 공공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고, 사회 데이터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킴. *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데이터화 운영시스템을 구축함.

	* 핀테크를 적극 발전시키고, 지식재산권의 증권화 등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자본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함.
재정정책 제도의 혁신·완비	* 자체 역량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지출 구조를 고도화하고 민생 투자를 확대하며, 민생 분야의 "핵심적인 작은 일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보장 메커니즘을 강화함. * 성(省) 정부의 시·현(市縣) 정부에 대한 재정시스템을 혁신하고, 성(省) 정부의 시·현(市縣) 정부에 대한 이 전지급 규모와 정확성을 확대하며, 장려금·지원금·이전지출의 유형별·등급별 관리와 지역통합발전 분야에 서의 개혁을 심화함. * 생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연결되는 재정지원 메커니즘을 확대 시행하며, 26개의 현에 대해 실적 평가 에 따른 장려 메커니즘을 완비함. *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성급 통합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향촌진흥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상시화된 재정자금 직접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과 인민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직접적으로 혜 택을 누리도록 함.
"선행(善行) 저장"을 조성	* "선행을 숭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자선 선행(先行) 계획을 실시하여 고소득층과 기업가들이 선을 지향하고 사회를 돌보는 공익성 기업의 설립과 공익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공익기부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실행하며 자선표창제도를 완비함. * 자선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에 유리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주도형·원조형·산업형 공익자선 기관 을 적극 발전시키며, 공익자선센터의 서비스능력을 향상시킴. 공익재단을 적극 발전시키고 국가에서 공익 재단 전문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공익재단에 대해 정책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 도록 추진함. * 저장성 내 통합적인 자선서비스 정보플랫폼과 "별집형" 저장 비즈니스 공익자선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 모든 계층이 자선 공익과 사회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시킴. "사람마다 자선을 행하는 " 현대화 자선 이념을 발휘하고 "일일 소득이상 기부"(慈善公益一日捐) 프로젝트를 대표로 하는 전 인민 자선 이벤트를 개최함. * 온라인 자선과 스마트 자선을 추진하고 불법 온라인 모금 활동을 규범화함. 자선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제 도를 완비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자선 기부의 전 과정에 대해 스마트한 관리감독을 진행하며, 대중을 위한 자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자선을 실시함.
토지를 중심으로 한 향촌 통합 개혁 방안 모색	* 농촌집체경제 조직 및 구성원들이 자체 경영·임대·주식 매입·협력 등 방식을 통해 유희 농촌부지와 주택 을 활성화시키고 향촌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격려함. * 농촌 공동운영 건설토지의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집체경영 건설용 토지의 부가가치 분배메커니즘을 구축· 완비하며, 농민들이 자원하는 전제 하에 촌관리위원회가 회수한 농촌부지와 폐기된 집체 공익성 건설용지 를 합법적으로 집체경영 건설용지로 전환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을 모색함. * 신행 농업경영주체와 "삼위일체" 협력 경제조직을 결합한 현대화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농업자와 현대 농업의 유기적인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함. * 농민 주식배당 계획을 실시하고 농촌 집체자산 주식의 유통과 양도, 담보 등 다양한 형식을 모색함으로써 저장성 일체화 농촌 재산권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강삼각주와 상호 연동을 촉진함.
소득의 1차, 2차, 3차 분배 촉진	* 1차 분배는 시장이 요소의 기여도에 근거하여 직접 생산분야 내부에서 진행되는 분배로 이를 통해 국가, 기업 및 개인의 소득을 형성함. 1차 분배는 효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분배질서와 분배결과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침. * 2차 분배는 정부가 사회관리자의 신분으로 조세와 재정이전지출 등의 방식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진행하 는 분배로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소득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의 전반적 공평성을 촉진함. * 3차 분배는 도덕·문화 관습 등의 영향 하에 사회역량이 자발적으로 민간기부·자선사업·봉사활동 등 방식 을 통해 약자를 구제하는 행위로서, 사회 구성원들의 더 높은 정신적 가치 추구를 체현함. * 1차 분배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공평성을 강화해야 함. 2차, 3차 분배제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오독 과 오해임. * 노동, 자본, 재정소득이 주민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노동자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주민소득 통로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성 소득을 증가시켜야 함.

- 주택정책은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보장형 임대주택 및 공동소유 재산권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보장시스템을 완비하도록 추진함.
-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 16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처음으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제시한 후 줄곧 이 원칙을 강조해 옴.
- 실시방안에서는 토지 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함.

- * 인구 유입이 큰 대도시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시는 농민집단의 공동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 인민정부의 동의 하에 공동운영 건설 토지를 이용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을 모색하고, 도시지역과 산업단지에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구역의 공동운영 건설토지를 이용한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함. 농촌집단 경제조직은 자체적인 건설, 공동 경영, 주식 매입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수 있음.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한 공동운영 건설토지의 사용권은 대출당보로 사용될 수 있음.
- * 인구 유입이 큰 대도시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시는 도시계획 부합, 소유권 불변, 안전요구사항 충족 및 농민집단의 공동된 의견을 전제로 도시 인민정부의 동의 하에 기업과 비영리 기관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 또한 토지의 용도변경도 허용하고, 토지 대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며, 원래 할당된 토지는 기존의 할당방식을 유지할 수 있음. 그 외 토지사용권 보유자도 스스로, 또는 기타 시장주체와 협력하여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할 수 있음.
- * 인구 유입이 큰 대도시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시는 도시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민정부의 동의 하에 전체 산업단지 중 행정사무 및 생활서비스 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 면적의 비율을 7%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면적 비율의 상한을 인상하고, 인상된 부분은 주로 기숙사형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되며, 대량의 상품주택 건설은 엄격히 금지됨. 산업단지 내 각 산업프로젝트의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또는 건축 면적을 집중시켜 일괄적으로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장려함.
- * 유희 및 비효율적인 사무실, 호텔, 공장, 창고, 과학연구, 교육 등 비거주 주택에 대해 도시계획 부합, 소유권 불변, 안전요구 사항 충족 및 대중 의사 반영을 전제로 인민정부의 동의 하에, 보장형 임대주택으로 재건하는 것을 허용함.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토지 이용의 특성은 변하지 않으며, 토지 대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
- * 인구 유입이 큰 대도시와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도시는 고용과 생활간의 균형 원칙에 따라 주거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공급 비율을 높이고, 연간 주거용 토지공급 계획 작성시 임대주택의 토지이용 계획은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주로 산업단지, 주변지역, 역세권 및 주요 건설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이로써 산업·도시·사람 간의 융합 및 사람·토지·주택 간의 연동을 유도함. 임대주택을 위한 토지는 양도, 임대 또는 할당 등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양도나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 토지는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조정방법을 전제조건으로 양도 대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음. 일반 상업용 주택을 새로 건설할 때, 일정 비율의 보장형 임대주택을 같이 지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과 관리방법은 시·현 인민정부가 결정함. 지하철 노선위에 있는 부지에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장려함.

- "저장 내 평안한 거주(浙里安居)"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관한 내용도 포함함.

- * 부동산시장 규제 및 통제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시 정부의 주요 책임을 확실히 하여 "하나의 도시, 하나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도시정책을 실행하고,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추진함.
- * 공공임대주택, 보장형 임대주택, 공동소유 재산권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기본 시스템 및 지원정책을 개선하며 주택 공적 자금 정책 메커니즘을 개혁함.
- * 공동 건설토지, 기업 및 기관 소유 유희지 활용, 재고 유희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방안을 모색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21만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신도시주민, 저소득층 등 중점 계층의 주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
- * 장기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고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임대 및 구매 주택이 공공서비스 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한다.
- * 인구 순유입과 토지공급의 연동,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의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임대주택 용지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실행하고, 토지 공급은 임대주택 건설을 우선으로 하며, "한정된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경쟁력 있는 품질, 경쟁력 있는"

는 임대주택”의 토지양도방식을 모색해 상품주택의 현물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함.

- * 도시와 농촌에 밀집해 있는 판자촌에 대한 리모델링을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13만 개의 리모델링 주택을 건설함.
- * 도시 및 농촌 주택에 대한 안전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위험 주택의 리스크를 제거하며, 상시적인 관리 및 개조 메커니즘을 완비함. 또한 농촌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 주택안전보장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며, 전통 마을에 대한 과학적인 보호를 전제로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빨리 모여서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기(大搬快聚福民安居)” 프로젝트를 심도있게 실시함.
- * 주택설계 수준을 향상시켜 현대적이고 주거하기 좋은 “저장파(浙派) 주민”을 형성하고 새로운 강남수향(江南水乡)의 이미지를 구축함.

- 조세 면에서는 현대 조세제도를 구축하고 지방세·직접세 시스템을 완비하여 조세제도구조를 최적화하고 직접세 비율을 적당히 늘려 세금 징수·관리제도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재분배에 대한 조절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함.²⁾
- 최근 조세개혁의 특징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범위 및 생필품 구매에 대한 저세율 범위 확대 △개인소득세 비용공제기준 상향 조정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금감면 시행 △탈세 관련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 등이 있음.
- 중국의 조세구조는 직접세 비중이 약 39.8%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간접세 비중은 약 4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 2020년 개인소득세가 중국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중국의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의 비중 구조는 큰 차이가 있음.
 - * 2020년 재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한 비중은 8.7%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신흥국의 평균수준에 불과함.
 - * 부동산세는 일부 시범도시에서만 징수되었고, 아직 전국적으로 부동산세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
 - * 2020년까지 중국의 상속세 관련 법규는 제정되지 않았고, 아직 부과되지도 않음.
 - * 간접세의 경우, 중국의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39.5%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은 편이며, 신흥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임. 소비세 비중은 8.0%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며, 신흥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학자들은 중국의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세 비율을 적절하게 높이고, 간접세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며, 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를 적절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 개인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당히 높이고, 개인세의 소득분배 조정역할을 강화함. 종합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구조를 최적화하며, 과학기술혁신 인재에 대한 장려에 초점을 둠. 특별 추가공제를 확대하여 개인 및 가구별로 상이한 조세정책을 실행함. 재산세 비중을 적절하게 높이고, 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함.
 - * 간접세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고급 사치품·고급 소비 활동·고오염 상품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등 소비세 과세대상 범위를 적절히 확대함.

2) 중국의 현행 규정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세정책을 제정·실행할 수 없으므로 최근 중국 조세개혁의 특징, 조세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논술함

질의응답(Q&A):

Q 1. 발표 중에 말씀하신 3차 분배의 경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압력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자기업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지?

A 1. 3차 분배는 한국이나 미국이 중국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함. 많은 국가들은 기업이 자선이나 기부를 하면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므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음. 자발적인 공익기부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대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공동부유의 함의로 볼 때 중앙과 각 지방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 및 외자기업을 통틀어서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함. 향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는 신규 기업을 제외하거나 경제규모 등 요인들을 고려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음. 현재 발표된 정책 내용에는 전반적인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차 분배는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량의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한다는 것임.

Q 2. 저장성(浙江) 공동부유 시범구는 중산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A 2. 저장성의 산업발전 측면에서 볼 때 첨단기술 산업, 디지털 산업, 서비스업 등 혁신적인 산업들의 발전에 중점을 둘 것임. 그 외 토지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부동산업, 민박 등 관광업, 그리고 실버경제도 적극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Q 3. 자료 중에 지식재산권의 증권화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국의 경우는 특허권이 나 실용신안권을 주식처럼 증권화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

A 3. 지금 말씀하신 지식재산권의 증권화에 대한 내용은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의 사회자원 분배에 대한 역할을 확대시키고자 함. 여기에는 주식 매입의 형식도 포함함.

Q 4. 과거 중국 정부는 지니계수에 대해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았음.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통계국에서 중국의 지니계수에 대해 발표하였고 중국 경제학자들도 중국의 지니계수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음.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니계수를 발표할 것인가?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지니계수는 현재 0.46에 달하며 이는 2009년의 0.49보다 0.03%p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의 지니계수가 언제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A 4. 제가 중국의 지니계수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움. 중국 정부는 직면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 하지 않음. 오늘 저의 발표 내용 중에 공동부유의 발전을 제약하는 중대문제

중 하나로 중국의 지니계수가 최근 몇 년간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공동부유를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음. 중국은 14억 인구의 국가이며, 개혁개방 이후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필연적인 현상이었음. 현재 중국에는 마윈(马云)과 같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최저빈곤계층도 개혁개방 이전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 중국의 빈부격차는 양극화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함. 양극화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말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부자도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도 같이 소득이 늘어남.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현재 지니계수가 0.4를 상회하여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임.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공동부유를 단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달성하고자 함. 그렇기 때문에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의 계획에서도 공동부유의 실질적인 진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 공동부유는 중국 전체 인민들을 향한 중국공산당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음. 개혁개방 초기에 제기했던 샤오캉 사회의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이 공동부유의 목표도 필연적으로 실현할 것임. 물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임. 이런 점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함.

Q 5. 중국의 공동부유와 현재 북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모델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 모델은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데 비해 중국의 공동부유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 같다고 생각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5. 중국의 공동부유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과는 차이가 있음. 공동부유는 단지 복지 정책만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아님. 물론 사회보험이나 실업자 지원과 같은 복지정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정부와 전체 인민이 역량을 합쳐 함께 노력해야만 공동부유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임. 중국에서 말하는 1차, 2차, 3차 분배는 각각 시장, 정부, 민간사회라는 세 주체를 강조하고 있음. 첫째는 이전지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등 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고, 둘째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데이터 등 시장요소를 활성화시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회역량이 자발적으로 기부나 자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역할을 장려하는 것임. 또한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임. 특히 취업지원정책이나 기술인재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음. 절대로 사람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만 기대해서는 안됨. 중국 속담에 "与其授人以鱼,不如授人以渔(물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뜻)"라는 말이 있음. 중국의 공동부유는 공동건설·공동향유를 뜻하며, 정부나 기업 어느 하나의 주체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음. 중국은 나태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길 원하지 않으며, 중국의 공동부유는 물질이 풍족할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부심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임.

Q 6. 발표내용 중에 시진핑 주석의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셨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투기 방지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함. 중국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 축소 조치 외에 다른 어떤 투기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이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보장하는 공급측면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집을 소유하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주

택을 구매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남.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A 6. 농촌과 비영리 기관의 토지를 활성화시키고, 유휴 토지를 충분히 활용하는 정책이 바로 주택 관련 조절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음.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행위도 줄어들 것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데이터는 없지만 중국의 농촌과 도시에는 큰 규모의 유휴 토지가 있음. 특히 도시화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에는 갈수록 많은 주택용 부지(宅基地)가 생기고 있음. 저도 고향이 농촌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저의 고향만 해도 많은 주택용 부지가 남아도는 상황임. 일부 지방에서 지표(地票, 택지 개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농촌토지와 도시 근처의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농촌의 주택용 부지를 활성화시키는 조치임. 이를 통해 토지의 공급을 늘려 농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음. 그리고 도시의 국영기업과 비영리 기관 소유의 창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음. 예전에 베이징 주변 지역과 일부 지방에서 부동산 권리 비공인 주택(小产权房: 집단토지에 건설한 주택으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택 구매자는 장기 사용권만 보유하는 주택)을 시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러나 향후 관련 정책을 조정한다면 다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자체 역량에 맞게 해야지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기대치를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됨. 공동부유를 단번에 실현할 수 없듯이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것도 객관적인 사실임. 조사연구에 따르면,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도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공 임대주택에 산다고 함. 이번에 저장성 당서기(省委书记)도 "우리는 공동부유 시범구를 건설함에 있어서 절대로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정하거나 일을 지나치게 벌이지 않을 것이다.(不吊高胃口, 不做过头的事)"라고 강조한 바 있음. 공동부유는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는 부유이며, 동일한 시간에 동등한 정도로 실현하는 것이 아님. 젊은이들이 초반에는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중에 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나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함. 현재 중국의 보장형 주택은 공공임대 주택(公租房), 한정가격 주택(限价房)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Q 7.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후에 평등주의와 공산주의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다가 70년대 말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음.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중국의 경험도 궁극적인 공평성을 추구하다가 효율성으로 중점을 옮기면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함. 중국이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형평성의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형평성에 중점을 둔다면 성장과 효율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공동부유가 본질적 요구이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하고 1차, 2차, 3차 분배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정부의 손이 시장에 관여하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면 중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효율성에 기반한 고속 성장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차 분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시장의 요구가 아닌 정부가 정한 목표대로 추진한다든지, 2차 분배에서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조절을 강화한다든지, 3차 분배에서 기업의 자선과 기부를 많이 장려하는 것 등은 정부의 관여로 인해 시장과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평가절하 등 단기적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기업의 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중에는 자본 조달 및 축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물론 형평성과 효율성 간, 시장과 정부 간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이 현재 엄청난 실험을 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쉽지 않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A 7. 지금 하신 질문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천적인 측면에서나 모두 큰 범주에 속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임. 형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면이 있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상충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함.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형평성이 효율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였음. 돌이켜 보면 중국은 아편전쟁 이래 1840~1949년의 백년 동안 제로성장에 빠졌다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1950~77년에는 산업생산액이 연평균 13.5%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음. 당시 건국 초기의 중국은 현재에 비해 훨씬 공정한 사회였다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중국은 비교적 공정한 제도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최대의 효율성도 달성했다는 사실임. 물론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양자는 필연적으로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함. 중국은 한때 과도하게 평균주의를 강조했다가 발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음. 둘째로, 형평성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기회, 권리, 제도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함. 절대적인 공정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형평성을 추구하는 문제도 생산이나 사람들의 의식 등이 발전됨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생산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의식이 트이지 못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필연코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됨. 셋째로, 정부의 관여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 분배, 기업효율, 기대심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정적인 규칙과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하고 시장의 기대심리를 높여 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알리바바 그룹의 사례를 예로 들자면,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에 183억 위안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음. 이로 인해 기업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임. 그러나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정부는 자본 확장에 대해 제한된 범위와 마지노선을 정함으로써 자본의 활용을 규범화하고자 하는 것임. 중국 정부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과학기술혁신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적극 격려할 것이며 조세 등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예정임. 그러나 불법 소득이나 독점을 통한 소득은 엄격히 금지시킬 것임. 최근 이와 같은 이유로 배달 플랫폼 메이뽕(美团)에 대해서도 30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음.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는 질서 있는 공정한 경쟁과 자본의 수익창출을 격려하지만 동시에 일반 대중들의 소득창출 기회도 보호할 것임. 기업 독점으로 인해 기타 기업이나 일반 대중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음.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에 관련된 정책들은 아직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 내용들만 발표되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에 있음. 그리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 등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함.